



내용문의	최윤정 연구위원 ☎ 02-3156-7176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 7. 3.(금)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4쪽

대학 인권센터, 양성평등 사업 추진 어려움 1순위는 전담인력 부족 65.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발표

231개 대학 조사 통해 인권센터 운영 실태 분석
성희롱·성폭력 대응 넘어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기반 강화 필요

<연구 소개>

본 연구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확대된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231개교), FGI(17개교),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병행함. 연구 결과, 인권센터는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대학 유형·규모별 설치 시기와 제도적 기반 격차가 뚜렷하며, 이는 인력·예산·조직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전담 인력 부족, 높은 경직률,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예산이 핵심 한계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사립·전문대학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또한 다수 대학에서 인권·양성평등 업무의 통합운영이 일반화 되어 업무 과중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존재함.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체계 미비, 법률자문 부족, 신종 사건 대응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이수 중심의 형식화 경향이 지속됨. 이에 본 연구는 법·제도적 기반 강화, 조직 운영 내실화(예산 기반 내실화, 인력 및 전문성 강화, 공시자료 지표 개선), 양성평등 업무의 질적 고도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분	내용
조사방법	웹 설문조사
조사대상	전국 457개 공시대학 인권센터 중 응답한 최종 231개교(응답률 53.6%)
조사내용	인권센터 운영체계, 양성평등 업무 현황, 애로사항, 인식 및 개선 요구 등

*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조혜승·최윤정·김정수·송치선·김재윤(2025).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인권센터의 양성평등 사업은 주로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담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 인권센터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59.1%,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문화행사 43.2%,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30.9% 순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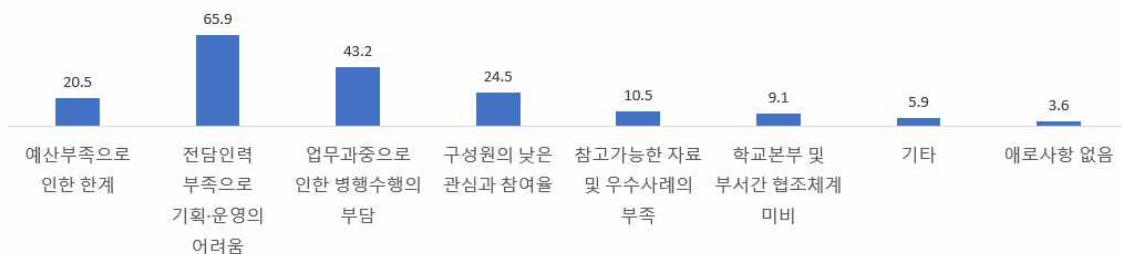


주: 1)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대학(220개 대학) 기준임.
 2) 복수응답

<그림 1> 인권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

- 양성평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이 65.9%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행 부담 43.2%, 구성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율 24.5%, 예산 부족 20.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1)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대학(220개 대학) 기준임.
 2) 2순위까지 복수응답

<그림 2>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인권센터도 그 이유로 전담 인력 부족 72.5%, 예산 부족 45.0% 등을 꼽아, 인력과 예산 문제가 운영에 있어 공통된 제약으로 확인됐다.
- 한편, 2024년 기준 인권센터의 각 업무 전체 비중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 비중은 교육(집체·화상) 77.1%, 연구 및 실태조사 60.0%, 각종 문화행사 55.6%, 조사·상담 39.5%, 사건처리 34.1%로 나타났다.

(단위: %)



주: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대학(220개 대학) 대상임.

<그림 3> 인권센터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 업무 비중

- 연구진은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대학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 지원의 차이가 크다.” 라고 지적하였다.

*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대학 내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핵심 과제로 ①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기준 명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③ 교육부·성평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④ 소규모·신설 인권센터 지원사업 운영, ⑤ 전담인력 고용 안정과 직무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⑥ 대학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⑦ 권역별 법률자문 및 조사자문 지원체계 구축, ⑧ 양성평등 의식증진 실천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 김종숙 원장은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이번 보도자료에서 다룬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idx=133645>